

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

2007. 2. 7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추진배경

비전과 추진전략

부문별 정책과제

수도권 질적 발전

향후 추진계획



I

추진배경



국가과학기술위원회

1. 왜 2단계 정책이 필요한가?

그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중점

- 공공부문 주도의 국가기관 이전, 행복·혁신·기업도시 건설
- 인재·기술·산업이 결합된 내재적 지역혁신 역량 강화
 - ➔ 비수도권 GRDP 및 수출 비중 증가 등 성과

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 지속

- ☛ **수도권 인구 비중[%]: (02)47.2 → (06)48.7**
☛ **총사업체 수 비중[%]: (02)45.6 → (05)46.6**

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

- ▶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으로 획기적 지방발전 전기 마련
- ▶ 1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



2. 참여정부의 정책의지

-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
[02년 대선공약]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·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
[06. 9.19/10.17]

-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세 차등화, 복지·보육 등 획기적 정책 검토
[06.11.2, 제3기 균형위 출범시]

-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 개발
[06.11.29, 누리사업성과보고회]



Ⅱ

비전과 추진전략



국방과학기술개발위원회

1. 정책비전

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

2단계
[민간부문]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

기업하기 좋은
투자환경 조성



살기 좋은
생활여건 조성

1단계
[공공부문]

다핵형 국토공간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
- 혁신도시·기업도시
- 공공기관 지방이전

지역혁신 역량 강화

- 지역혁신체계[RIS] 구축
- 지역 R&D 역량 강화
- 지역전략산업 육성

2. 추진전략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-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: 주거 · 교육 · 의료 등 기반 확충

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

- 지방 대도시, 산업단지 클러스터,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
- 기업환경 · 생활여건 등 종합 패키지 지원

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

- 지역발전 정도, 투자환경 등을 감안 3그룹으로 분류
 - 분류[안] : 발전지역, 성장지역, 정체지역
- 지역분류, 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

3. 추진과제 : 2대 부문 14개 과제

정책
부문



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- 1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- 2 인력난 해소
- 3 산업용지 공급 확대
- 4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-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-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
- 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정책
과제

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- 1 고품질 주택 공급
- 2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-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-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-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
- 6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
-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Ⅲ

부문별 정책과제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정책방향

- 지방 창업 · 이전 ·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 · 인력 · 부지문제 집중 해결

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
- 지방 창업 · 이전,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
[1안]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(10~30년) 병행
[2안]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
※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
- 지역발전 정도,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
-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
[현행 : 대기업 15%, 중소기업 : 10%]
-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 혜택 부여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② 인력난 해소

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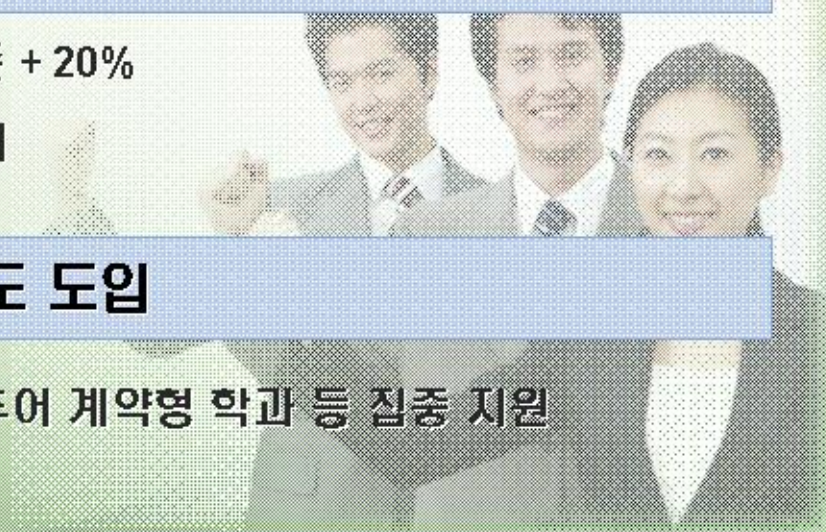
-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지급
※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

- **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**

-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-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

●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

-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추어 계약형 학과 등 질종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

● 저가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

-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집중 지원
※ 필요 시 농업진흥지역 등도 적극 활용
- 혁신/기업도시에 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
[예] 평당 연간임대료 : 조성원가의 1% 미만, 임대기간 : 50년



- **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**

-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
- * 국무총리 소속의 「지방산업용지 애로타개위원회」 (가칭)를 두어 토지이용 규제 일괄처리
-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-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
-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등



⑦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- **기업경영 및 종업원 생활여건 개선 등 포괄적 지원대책 마련**
 - 기업경영 애로사항 : 용지확보, 공장설립, 종업원 교육 등
 - 종업원 생활여건 : 주택 · 교육 · 보육 등
- **종합패키지 지원시스템 구축**
 - 관계부처 · 지자체 ·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업별 합동지원팀 구성 · 운영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정책방향

- 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
-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①

고품질 주택 공급

-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
 - 거주기간,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·완화
 -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(현행 2년) 대폭 연장
-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 - 지방이전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- 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
 -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②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
● 지방의 초중학교를 '지역복지 거점학교'로 운영

- 특기·적성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·복지·학습 거점으로 활용



● 지방 명문고교 육성

- 전국지역 대상 1군 1우수고 육성(136개교)

-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

· 학생선발,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교원인사 등 자율권 부여

●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

- 프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● 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
- 상속재산 지방대학 기부시 상속세 감면
-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


● **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지원**

- 지방대학 특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
[예] 인사교류·공동연구 등 포괄적 협약(MOU)체결
비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부담조건으로 분원 설치·운영 등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④

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지역보건소

1차 진료
지역의료건강센터

지방의료원

2차 지역거점
의료기관으로 육성

지방국립대 병원

3차 의료기관으로
특화 발전 유도

-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공급

주민건강정보
DB화

정기적 검진
[방문검진]

응급의료 지원

⑤

지역 선도도시의 교육 · 문화 · 복지 인프라 확충

- 혁신 · 기업 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지정
- 문화 · 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및 복지시설 확충 지원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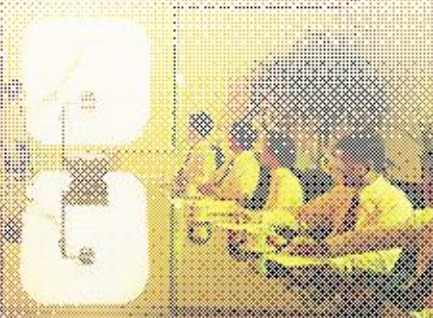


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-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
 -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%수준으로 확대
 - ※ '07년 사회개발 지출 비중 : 36.2%

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-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
 - 재정력 지수, 노령화 등 낙후도 요소 반영 확대
- 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
 - 차등화 대상사업 및 차등 폭을 대폭 확대
 -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



〈참고〉 재원소요



- 재정지출 소요 : 연간 1.2조원 내외
 - '07년 기존 예산규모 : 5천억원 수준
 - '08년에 5천억원 규모 증액 필요
- ※ 기금 · BTL 자원(2천억원) 별도



- 법인세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구체적 경감 방안 및 규모 결정

IV

수도권 질적 발전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수도권 발전방향

● 수도권 질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

- 교육, 문화, 주거,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
- 지식클러스터, 국제교류, 금융기능 강화 및 SOC 확충



● 지방화 시책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

- 현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계획적 관리계획 수립중
 - ※ 국토연구원에서 '06.12월 기초연구 수행,
 - '07.12월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





V

향후 추진계획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2.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

부문	과제명	조치유형			시행시기		차등화 방안	
		행정 조치	법령 개정	국민 참여	단기	중장기	2 그룹	3 그룹
정책 과제	기업 대책							
	① 법연세 부담 대폭 경감		○	○		○		○
	② 인력난 해소	○			○			○
	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	○			○			○
	④ 경제자유구역·무역자유지역 추가 지정	○			○		○	
	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	○	○		○			○
	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		○	○		○	○	
	⑦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	○			○		○	
	사람 대책							
	① 고품질 주택 공급	○			○		○	
	② 지방 초·중·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	○			○			○
	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	○				○		○
	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	○			○			○
	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	○				○	○	
	⑥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	○			○			○
	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	○			○		○	
계	2대 부문 14개 과제	12	3	2	10	4	6	8



감사합니다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